

퇴직공제 누락방지를 위한 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

□ 퇴직공제제도 안내

- (제도의 목적)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이동하여 근로하는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('98.1.1.부터 시행)

<근거 법령>

-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건설근로자법”)
- ② 건설산업기본법(법 제82조, 시행령 제83조)

○ (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)

- 공사에정금액* 3억원 이상인 공공공사(민간투자사업 포함)
* 공사에정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제금액을 포함한 금액임
- 200호(실) 이상의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주상복합 건설공사
- 공사에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

○ (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)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

○ (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) 공제가입사업주는 매월마다 건설 근로자가 일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함

□ 건설근로자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

○ 퇴직공제 누락 주요 원인

- (고의누락) 사업주가 고의로 미가입하거나 근로내역 신고 후 미납부 등 제도 미이행 사례 발생

· 또한 4대 보험과 연계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발생된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내역을 누락 신고

- (인력관리 부실)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공사일보(출력일보)가 현장 팀·반장 수기에 의존하여 작성되어 누락되는 경우 발생
- (하도급사 영세성) 하도급자가 시공중 부도, 폐업, 자금 부족 등 이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누락 불가피
- (기타) 사업장 담당자 업무 소홀,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, 공제부금 원가 미반영, 업체 자금 난 등

○ 2018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범위반 주요 사례 안내

- 고용노동부 퇴직공제 합동점검 결과* 발생한 법 위반 사례를 공유·전파 하여 건설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강화 및 퇴직공제 자유 실천의지 제고
* 전국 126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'18.5.23.~7.20.(2개월)간 실시

< 사례 1 >

- (공사개요) 전북 군산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(492세대, 시공사 : (주)**건설)
- (적발내용) 과거 근로일수 신고 후 해당 공제부금 미납으로 과태료 처분 받았으나 이후에도 퇴직공제 이행태도로 근로일수 신고 고의 누락 및 1억 3천여만 원 미납 적발
- (조치결과) 관할 지방노동관서(군산지청) 과태료 부과 예정,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중

< 사례 2 >

- (공사개요)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(1,057세대, 시공사 : ***건설(주))
- (적발내용) 하도급 골조업체 근로일수 신고 고의 누락 대거 적발(30,554일), 하도급 계약 공제부금비 반영액 초과문제로 신고 고의 누락 및 1억 2천여만 원 미납 적발
- (조치결과) 발주기관 및 사업승인기관(용인시청)에 행정지도 요청, 원하도급 간 협의를 통해 공제부금비 실비정산으로 미납분 해소 완료